

한국축산물위생처리협회

협회지 제 76-1호 2003년 12월 19일(금)

제목1: ☐협회 임시회의 개최

-한국축산물위생처리협회 임시회의를 12월 29일(월요일 오후1시)에 협회사무실에서 아래와 같이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1. 일시 : 2003년 12월 29일(월요일 오후1시)
2. 장소 : 축산물 등급판정소 본소내 협회사무실
(경기도 군포시 당동 424-6)
3. 의제 : ① 도축수수료 현실화 자체로 인한 대책방안의 건
② 등급판정수수료 세금계산서발행 경과조치의 건,
등급판정수수료징수대행료 인상, 협회에 협조방안.
③ 도축세(지방세)의 목적세 전환의 건
④ 기타 현안

제목2: 서울축산물공판장 도축기능 2007년 폐쇄-결정 배경과 과제

-축산물 유통 대혼란 예고-

서울시가 최근 농협서울축산물공판장(이하 서울축공)의 도축기능을 2007년까지 폐쇄도록 최종 결정하자 축산농가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서울축공의 도축기능 폐쇄에 따른 뾰족한 대책이 현재로서는 없는 상태에서 이같은 서울시의 결정이 전국 축산물 유통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 우려가 높다. 도축기능 폐쇄 결정 배경과 문제점, 향후 전망을 진단해본다.

◆폐쇄 배경=가락시장 인근 훼밀리아파트 주민들이 1996년부터 악취 발생 등을 이유로 이전을 계속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갈수록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도축물량을 해마다 20%씩 감축, 도축기능을 2007년까지 전면 폐쇄하기로 최종 결정하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서울축공의 도축물량이 부천축산물공판장으로 이전될 때까지 도축기능을 잠정적으로 유보할 방침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농수산유통과 한 관계자는 “서울축공이 인근 아파트보다 먼저 들어선 데다 그동안 민원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 부분도 인정되지만 주민 항의 등이 끊이지 않아 도축기능을 폐쇄하는 것으로 못박게 됐다”고 밝혔다.

◆문제점=축산업계에서는 서울축공의 도축기능을 폐쇄할 경우 축산물 유통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전국 축산물 기준가격 결정 기능이 상실될 뿐만 아니라 국내 유일의 소 고급육 전문시장인 서울축공이 붕괴되면 결국 고급육을 생산, 출하하는 농가들의 수취값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축공은 하루 기준 소 350마리, 돼지 3,500마리를 도축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더욱이 서울축공은 이 시설의 유지를 위해 그동안 축산물의 안전과 위생을 높이기 위한 시설 개선에도 많은 비용을 투자해왔다. 그러나 서울시 안에 따라 20%를 줄이게 되면 내년의 경우 소 200마리, 돼지 2,000마리만 도축해야 하고, 2005년부터는 가동이 불가능해지게 된다. 도축수수료 수입은 크게 줄지만 인원과 장비는 일정 수준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연간 20억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 공판장 운영이 갈수록 어려워지게 된다는 것이다.

정용근 서울축공 중도매인조합회장은 “도축기능이 폐쇄된다는 얘기에 식육점주들이 거래처를 바꾸려 하는 등 벌써 동요가 생기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면으로-

◆ 전망과 대책=우선 도축물량의 감축은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 서울축공의 입장이다. 따라서 2007년까지 도축장 가동 및 유지에 필요한 최소 도축물량은 인정돼야 한다는 것. 또 도축물량이 줄어드는 만큼 지육 및 부분육 상장물량을 확대시켜 유통시장을 안정시키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다. 서울축공은 앞으로 서울공판장을 지방육 상장·경매 전문 도매시장으로 발전시키고, 급식사업 등 부분육 가공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활로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대신에 부천축공이 서울축공의 물량을 흡수토록 해 유통시장의 혼란을 방지한다는 전략. 그러나 1998년 3월 우성농역이 도축기능을 잃게 됨에 따라 저급육 시장으로 전락, 도매시장 운영을 포기하게 됐던 것처럼 서울축공도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따라서 축산물 시장의 혼란을 줄이고 공판장 운영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대체 도축시설 조기 확보를 위한 행정 지원도 절실한 실정이다.

농협축산물공판장분사 공판지원부 박광수 차장대우는 “서울축공의 도축물량이 부천축공으로 무리없이 흡수될 수 있도록 부천공판장의 부지 용도 변경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수도권에서 가동되고 있는 도축시설을 인수하거나 공판장을 새로 짓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발췌: 농민신문

TEL : 031-391-9767.

FAX : 031-395-6661

경기도 군포시 당동 424-6

(사)한국축산물위생처리협회